

I. 개 요

1. 일시 : 2016년 3월 18일(금) 12:00-15:30

2. 장소 : 서울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사무소 주민회의실

3. 발표자 및 발표 주제

- 김규관 일본팀 팀장: “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”
- 이홍배 동의대 교수: “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간 기술협력의 특징과 성과 고찰”

4. 참석자 (총: 9명)

- 원외(5명)
 - 김영근(고려대[일본연구센터] 교수)
 - 오태현(경희사이버대 교수)
 - 이홍배(동의대 교수)
 - 정훈(인천대 교수)
 - 현석원(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)
- 원내(4명)
 - 정성춘(국제거시금융본부장)
 - 김규관(일본팀 팀장)
 - 이형근(일본팀 전문연구원)
 - 이신애(일본팀 연구원)

II. 주요 발표 내용

<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>

- 아베노믹스는 2%대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, 이에 추가적으로 일본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함.
 - 일본 정부는 장기화되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2013년 4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국채매입과 위험자산 매입을 중심으로 한 양적완화를 시행함.
 - 2016년 1월 일본은행은 기존의 양적·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, 시중 금융기관들의 일본은행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추가한 3차원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발표함.
 - * 이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금융기관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3단계(+0.1%, 0%, -0.1%)로 나누어 예치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함.
 - 마이너스 금리 도입 직후 엔화약세와 주가상승이 나타나며 이에 따른 수출 증가와 자산 효과에 의한 실물경제 활성화가 기대 되었지만,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지 못함.
- 아베노믹스에 따라 주가상승, 엔화약세,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금융시장에서 나타났으며, 이 외에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의 이익 상승이 나타났으나 실물경제로의 과급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.
 -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 효과는 주요 성과로 평가되었으나, 관련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작년 여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제금융 시장 불안으로 주가하락과 엔화 가치 상승이 나타남.
 - 아베노믹스에 따른 수출 증가로 대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이익 상승이 나타났으나, 기업의 경기 회복 확신 부족으로 임금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실물경제로의 과급 효과가 여전히 미미함.

- 물가 상승률 2%대 달성을 위한 일본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정체되어 있으며, 2014년 4월 소비세를 인상 이후 나타난 소비 침체도 지속되고 있음.
- 최근 일본 기업의 내부유보금 증가와 기대보다 부진한 설비투자 추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감소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, 이는 기업 투자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최근 일본기업의 내부유보금은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, 2014년도에는 사상 최고치인 354조 엔을 기록함.
- 1990년 전후의 자산 버블 붕괴와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주된 항목으로 포함하는 내부조달을 통한 사업 자금 조달을 강화함.
- 또한 최근 기업들은 GDP상 투자로 계상되는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GDP 투자부문에 잡히지 않는 해외 투자와 무형자산투자에 적극적임.
* 내각부는 무형자산투자가 GDP에 반영될 경우, GDP가 3.0~3.6% 상승할 것으로 전망
-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을 우려한 기업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, 이는 주로 현지 자회사 설립과 현지 기업과의 합병 등의 형태로 나타남.

<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간 기술협력의 특징과 성과 고찰>

-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 산업기술을 도입한 일본은 설계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 강국으로 성장함.
- 제조기술과 설계기술로 구분되는 산업기술에서, 일본은 부품소재의 핵심인 설계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반면, 한국은 설계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임.
- 이러한 설계 기술 경쟁력은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, 일본기업들이 장

기화되는 일본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본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주된 요인으로 평가됨.

- 한일 간 기술 협력은 시대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며 발전하였으며, 이는 일본경제가 한국경제의 외부경제로서 작용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의 對일본 의존관계를 초래하기도 함.
- 한일 기술 협력은 1960~70년대 경공업·중화학 공업 관련 자본재 산업에서 일본의 일방적 기술 이전으로 나타났으나, 1980~90년대에는 일본 기업의 한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을 통한 소재 부품 중심의 기술 이전으로 변화함.
- 2000년대부터 기술 협력은 전략적 기술제휴, M&A, 기술자 교류 확대 등을 포함하는 기술 교류 형태로 발전함.
- 한국 경제는 형태부품 소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수출하는 패턴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, 이중 對일본 부품 소재의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對일본 의존도가 심화됨.
- 한일 간 기술격차가 축소에 따라 무역불균형 개선이 기대되나, 여전히 양국의 기술격차는 6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며 양국의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함.
- 한일 간 기술 격차가 축소되며 쌍방향적인 의존구조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양국의 큰 기술 격차는 한국의 對일본 의존 구조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함.
- 이러한 의존관계와 무역불균형 문제는 상호 경제 협력과 양국의 동반 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가됨.
- 양국 경제발전과 기업 이익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 한일 간 기술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, 한국의 지속적인 기술 향상 노력과 함께 한일 간 새로운 협력 확대 방안의 구축이 필요함.

- 한일 양국은 기술협력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위상을 높여왔으며, 기술협력 강화는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구축과 양국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한국의 일방적인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한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,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 개발을 통한 한일 간 기술 격차 완화가 필요함.
-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협력을 위해, 소재부품 관련 사업 및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교류 등으로 교류를 다각화 시켜 나가야 함.
- 또한 최근 한국 기업들은 기술협력에 소극적인 일본 기업들의 대체재로서 유럽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, 이보다는 일본과 구축해놓은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기술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간주됨.

III. 주요 토론 내용

<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>

- 아베노믹스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어 온 금융 부문의 추가상승과 엔화 약세 기조가 약화되었으나, 이는 세계 경제 불안정에 따른 것으로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판단하기는 어려움.
- 작년 여름 차이나 리스크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가중되며 일본에서도 주가 하락과 엔화 강세가 나타났으나, 여타 국가에 비해 일본 경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.
- 아베노믹스의 목표대로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은 중국의 경기 침체 및 글로벌 저유가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- 아베노믹스와 일본은행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,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 부진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일본 경제 전반에 장애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됨.
- 일본은행은 추가적인 마이너스 금리폭 확대 의지를 보였으나,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는 오히려 지방·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시중은행의 불안정과 실물경제 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음.
- 또한 양적완화 정책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나 출구전략은 부재한 상황은, 향후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음.
- 최근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.
- 최근 저조한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고 실업률, 수출 등의 경제 지표들이 일본보다 열악하게 나타남에 따라, 향후 한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.
- 이러한 경기 침체는 총수요 부족을 야기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, 한국 경제의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함.

<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간 기술협력의 특징과 성과 고찰>

- 한일 기술 협력의 역기능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,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협력을 축소하기 보다는 순기능을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- 한일 기술 협력으로 고착화된 한일 외부경제로 대일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단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- 하지만 이러한 기술 협력은 한국의 대 세계 부품 수출 증가와 대 세계

무역수지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서, 기술 협력의 순기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.

□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, 경제 협력에는 경제 외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경제 협력 강화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－ 한일 기술 협력이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 패턴을 경제 협력에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.

－ 하지만 경제 협력에는 정치, 사회 인식 등 경제 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술 협력에 적용했던 방법보다는 한층 다차원적인 협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.

□ 장기적인 한일 간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간 뿐만 아니라 학교 간의 협력도 중요하므로, 정부 차원에서 양국 학교 간 연계를 지원할 정책이 필요함.

－ 공동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·심층적으로 진행되는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국의 고등교육 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함.

－ 학교 간 협력은 양국의 우수한 기술 인재 교류와 인재 양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술 협력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.

－ 학교 간 협력에는 양국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, 한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와 효과적인 협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협력 지원 정책이 필수적임.

□ 향후 한일 기술 협력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 대기업과의 기술협력보다는 일본 중견 기업과의 협력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－ 일본 대기업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점차 감소

함에 따라 한일 대기업 간 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으로, 기술 협력 대상을 일본 중소·영세 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.

－ 일본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중·소규모 사업체에게 거래처 확보, 수출 진출·판로 지원 등을 대가로 한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－ 이 외에도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방법도 제안되었으나, 일본 정부는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의 M&A를 제한하기도 하여 해당 전략 실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.

/끝/